

# JEJU FORUM REVIEW

---

## 아시아, 협력의 중심에 서다

reports

왜 '협력적 리더십'인가  
세계를 이끌어 갈 한중일 3국 협력

---

interview

요한 갈통  
양허우란

---

2016-1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JEJU FORUM REVIEW

제1호 | 2016-1

---

## prologue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2

---

## reports

01 왜 '협력적 리더십'인가 6

02 세계를 이끌어 갈 한중일 3국 협력 12

---

## interview

요한 갈통 22

양허우란 24

##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2016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란 주제 아래 이 시대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국가·지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듯 아시아가 국제사회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 창출에는 협력적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사회 주역은 군사·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가치와 질서를 선도하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소프트파워를 수반할 때 제 구실을 다했다. 이제 아시아가 협력적 리더십의 중심점이 돼 다양한 계층·민족·문화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17년은 새 유엔 사무총장 취임, 미국 등 주요국 리더십 교체, ASEAN 출범 50주년, 브렉시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협정 Post 2020 등 범세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포럼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제주포럼 리뷰>가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2001년 출범한 제주포럼은 매년 5월 전·현직 국가지도자, 오피니언리더, 정책입안자, 언론인 등 세계 지성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협력 논의의 장이다.

<제주포럼 리뷰>는 올해 제주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을 7개 키워

드로 정리, 연관성 있는 내용을 묶어 네 권으로 엮었다. 각 권은 주제별 정책제안 성격의 요약 보고와 주요 연사를 직접 만나 관련사항에 대해 들은 인터뷰로 구성됐다.

2016-1호는 ‘아시아, 협력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협력적 리더십과 한중일 3국 협력을 다뤘고,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창립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 박사와 양허우란(Yang Houlan)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인터뷰를 실었다. 2호는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조건’을 주제로 핵 안보와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옌쉐퉁(Yan Xuetong)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이브 티베르기엥(Yves Tiberghien)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인터뷰를 담았다.

3호는 ‘위기의 한국경제, 혁신이 답이다’를 주제로 경제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기업 인권, 지원 방안들을 다뤘고,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푿(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미래재단 대표이사,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 로위국제정책연구소 국제안보연구부장, 제프리 킬(Geoffrey Till)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 인터뷰를 게재했다. 4호는 ‘지속가능 개발의 최전선, 제주’를 주제로 글로벌 제주 발전전략을 환경, 문화 관광 측면에서 다루고, 김숙전 주유엔대표부 대사와 셴딩리(Shen Dingli)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부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reports

01 왜 '협력적 리더십'인가

02 세계를 이끌어 갈 한중일 3국 협력

## 01 왜 ‘협력적 리더십’인가

제11회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란 주제 아래 이 시대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아시아

오늘날 세계는 저성장, 빈부격차 심화, 기후변화, 에너지·식량·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인권 문제 등 기존 가치와 기준으로 해결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들 도전과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국가 간 협력은 물론 개인, 기업, NGO,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모든 주체들의 공조가 절실하다.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데 아시아 각국의 역할과 기여가 필수적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내총생산(GDP)은 21조 2812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른다. 아시아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변화와 기술발전이 적응한다면 2050년 아시아는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 주역이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아시아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그 비전 달성을 위한 ‘협력적 리더십’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전쟁 방지와 국제평화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국제연합(UN)을 창설했다. 중소국가로 파편화되어 있던 유럽 각국은 유럽연합(EU)을 형성하는 데 힘을 모아 역내 안보 및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했다. 모두 관련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질서 구축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그를 위한 협력적 리더십을 논의하고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 유력 지도자들과 지성이 한자리에 모인 제11회 제주포럼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시의적절한 메시지 발신지였다.

아시아 역내 협력은 제주포럼의 기조인 ‘평화와 번영’을 향한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협력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인 지도자와 학자,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과 인식적 측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가능성, 한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지역’을 넘어 ‘공동체’가 되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역내 다자주의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영토 분쟁, 역사 문제, 안보 경쟁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공통 목표를 설정해 아시아의 질서를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재편할지 고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자주의를 위한 제도적 접근은 지역협력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싱가포르 총리를 역임해 ‘작은 나라의 큰 외교’ 기조로 지역협력을 이끈 고축통(Goh Chok Tong)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은 제11회 제주포럼 개최식 기조연설에서 “과거의 적대국들이 오늘날 협력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들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영토와 인구, 경제사회구조, 통치체

“협력적 리더십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과거의 적대국들이 오늘날  
협력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

제가 상이하지만 빈곤 퇴  
치, 발전 격차 해소, 국민  
복지 향상이라는 공동 목  
표를 보유하고 있다. 그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세안  
은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제  
각기 다른 회원국들을 결합

시켜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세안의 활동은 갈수록 활발하고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8년 ASEAN+3(아세안 회원국 10개국 + 한국·일본·중국),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구해 왔다. 2015년 12월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해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등이 있다.

이처럼 아시아 지역에 경제와 군사안보를 위한 협력체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적 공고화를 위한 과정은 아직 멀고 험난하다. 다자협력체 성공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대화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 축적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 및 영토 문제로 다자협력체가 확고히 자리잡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외 협력을 통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짐 볼저(Jim Bolger) 전 뉴질랜드 총리는 세계지도자세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대규모 다자 경제공동체는 무역을 통해 국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테러리즘 등 새로운 도전뿐 아니라 민족주의, 국가 정체성, 영토 분쟁 등 전통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엔리코 레타(Enrico Letta) 전 이탈리아 총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국제사회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꼽으며 “국제관계가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동의 책임의식, 토론과 교류의 장, 폭넓은 다자 간 의사결정 형식이 필요하

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협력의 경험이 축적되면 아시아 역내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 협력의 첫걸음, 화해

새로운 시도를 성공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도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제11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지도자와 국제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협력적 리더십 구현을 위해 신뢰 구축, 화해, 조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시아에는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역사, 언어를 지닌 여러 민족이 공존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상생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협력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과 갈등 요소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이 국가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협력적 리더십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회사에서 “협력은 ‘공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하며, 공존이라는 질서와 가치가 공유될 때 여러 차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지도자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저해하는 공통 요소로 역사적 유산에 뿌리를 둔 난제들을 꼽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역내 갈등 원인으로 역사 및 영토 분쟁을 언급했다. 반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과거에 얽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오래된 불화를 해소해야 미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은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와 기구 구성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롭게 갈등을 해소한 사례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럽의 예를 제시했다.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는 역사적 질곡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 나라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 공동선을 위해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갖춘 현명하고 굳건하며 선견

지명을 지닌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배를 국제사회에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도미이치(Tomiichi Murayama) 전 일본 총리는 아시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과 식민지 지배 역사 청산 및 화해를 제안했다.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이익을 함께 나누고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관계 전문가도 이번 제주포럼에서 협력의 첫걸음으로 화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존 닐슨라이트(John Nilsson-Wright) 채텀하우스 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는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적 리더십을 향해: 이론과 실제’ 세션에서 기술 진보에 따른 각국의 군사적 역량 강화와 안보 위협 증가,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국가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일련의 시도를 아시아의 협력 저해 요소로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도전들로 아시아 각국은 전통적 동맹 관계로 회귀하거나 일본과 같은 일방적인 새 접근법을 취할 것”이며 화해를 위한 노력이 협력의 관건임을 강조했다. 유럽의 협력을 촉진한 것도 독일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반성하면서 보인,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화해를 통한 ‘정서적 공감’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 구축보다 협력 달성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존 들러리(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에 공감하며 아시아 각 국가의 역사 정체성 및 교육 문제가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 교육 자체가 민족주의 양성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단일 입장만을 고수해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역사적 서술에 도덕주의를 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러한 역사민족주의의 극단적 예이며, 한국의 역사 교과서

“오래된 불화를 해소해야 미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정화 문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중국의 일률적 역사 해석 등이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유일사관적 개념을 벗어나 연구자, NGO,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는 지역통합적 아시아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력적 리더십 구현을 위한 각국 지도자들의 결단력 및 의지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자국 국내 정치의 포로가 된 탓에 아시아의 협력적 리더십이 더욱 난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대표적인 양속 관계인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한 것을 예로 들며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콘라드 아데나워 독일 총리는 자국민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여론을 화해 쪽으로 이끌었고 그 역사적 화해가 유럽연합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02 세계를 이끌어 갈 한중일 3국 협력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각국의 개별적 노력과 함께 국가 간 공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세 나라의 협력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질서에 변화를 가져온 명실상부한 역내 핵심 국가다. 일본은 과거보다는 역할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영토 문제의 중심에 있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지식, 문화 분야를 선도하며 역할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 3국의 GDP를 합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GDP의 80%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중일은 아시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분명하다. 또한 6자회담 참여국으로 북핵 문제 등 안보의 주체이자 핵심이다.

### 먼 이웃나라 한국·중국·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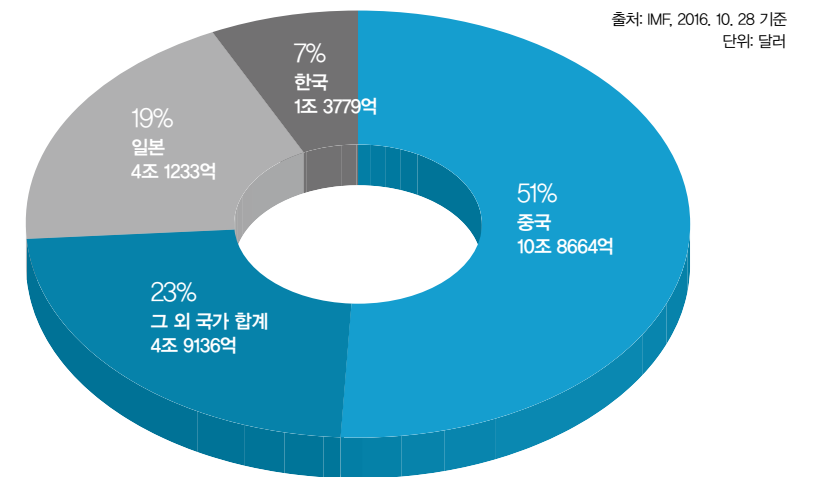
아시아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강조되는 반면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식적 기반은 미흡하다. 아세안이 존재하는 동남아와 달리 동북아에는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각종 현안을 풀어

나갈 영향력과 권위 있는 상설 협력체가 부재하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역사 및 영유권 문제로 상호 협력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제11회 제주포럼에서는 유력 학자·전문가·정책입안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한중일 3국 간 협력 현황과 심화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벌였다. 전문가들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할 강화 및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각 나라 사이의 신뢰 축적을 한중일 협력 강화의 선결과제로 보고 환경, 에너지 등 이른바 연성 이슈 관련 대화와 협업을 바탕으로 군사, 안보 등 경성 이슈로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가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강조됐다.

### TCS 위상 강화,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TCS는 한중일 3국 평화와 공동번영 실현을 위해 2011년 9월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다. TCS는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조



〈그림1〉 아·태 지역 내 한중일 3국 GDP 비중



직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정무, 경제, 사회·문화, 행정의 네 부서로 구성돼 있다. TCS는 협력사업 발굴과 이행 촉진을 통해 3국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많은 갈등 요소가 상존하는 한중일 간 협력을 원활히 이끌어내는 데 권한과 위상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됐다. '새로운 한중일 협력 관계 구축' 세션에 참가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각국 정부 차원에서 TCS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협력기금을 확대해 TCS를 지원하고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을 시작으로 매년 3국에서 번갈아 개최되었지만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이 심각해져 중단되었다. 이후 3국 간 역사 문제까지 확대돼 난항을 겪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5년 극적으로 다시 개최되었다. 제주포럼에 참석한 동북아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 협력을 위해 각국 정상이 매년 담론의 장을 갖는다는 상징성과 파급 효과를 강조하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 정례화, 위상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아태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

한중일 경제 협력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귀엔권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새로운 한중일 협력 관계 구축' 세션에서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혁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며 경제정책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중일 간 전략적 경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세부 협력 방안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세 나라 중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일본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TPP, RCEP 등 이른바 '메가 FTA'를 통한 협력 가능성도 제기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치·경제적 평가' 세션에서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TPP, RCEP 외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국가들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대립과 갈등의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신뢰 외교' 전략이다. 6자회담, ARF, EAS 등 기존의 다자협의체와 협력적 보완 관계를 모색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구상은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높아지는 데 비해 정치·안보 협력은 뒤쳐져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연성 이슈를 중심으로 한중일 협력 방안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로드맵은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 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점차 다른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가는 동북아 다자 대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각 분야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중일 세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으로 심화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이해 및 지지 확보, 기능별 협력 강화 등의 진전이 이뤄진 반면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실행 지연, 동북아 안보환경 악화, 현 정부 이후 지속적 추진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 해결책으로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불안정한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조와 민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략' 세션에서는 '동북아인식공동체'를 형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 협력과 대화의 틀을 지속한다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점진적으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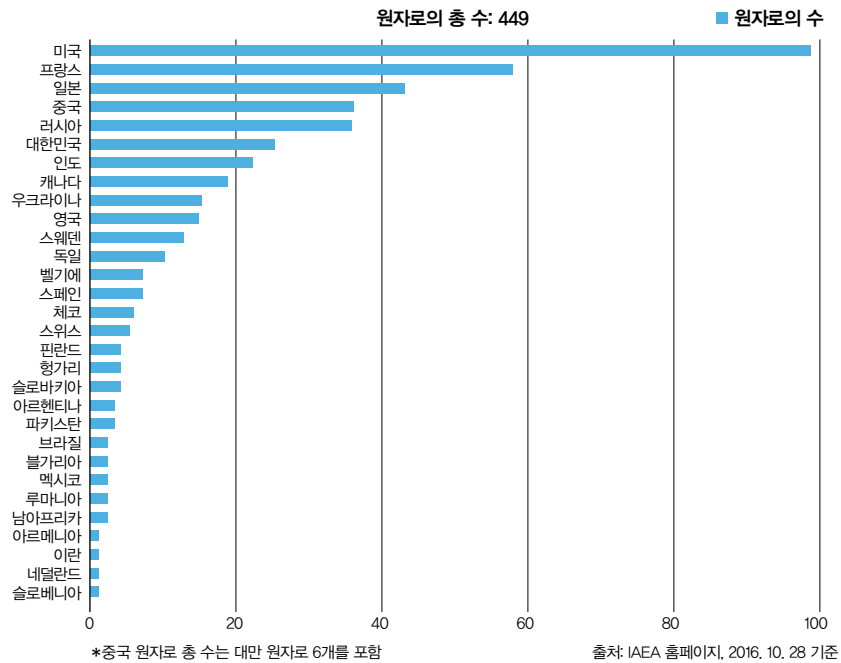
근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각 협력 분야별 인적·지적 교류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활성화,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제도화 기틀 마련, 국가별 민간 연구소의 이슈별 협력 담당 연구소 지정, 대국민 홍보 확산 방안도 제시되었다.

### 전 세계 원자로 4분의 1이 동북아에

환경 분야에서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한중일 3국 생물다양성 정책 대화,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BBI(Bio-Bridge Initiative) 국제 전문가 워크숍 등의 성과가 있었다.

제11회 제주포럼 ‘동아시아 녹색 평화협력의 새로운 모색’ 세션에서 환

〈그림2〉 국가별 원자로 보유 현황



경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경오염 물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협력체 건설, 재난성 환경오염에 대비한 긴급대응 협력체제 마련 및 재난 대응 통합 지역협력체 구축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협력과 관련해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에 북한 기후안전지원협의팀을 설치해 협력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환경협력이 동북아 안보협력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이다 테쓰나리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연구소장은 환경협력의 대안으로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 에너지 체계가 지역 분산형, 네트워크형 등 에너지 공유 방식으로 바뀌고 자연에너지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 3국의 에너지협력이 아시아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대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후쿠시마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원자력 사고는 발생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 안전 확보는 각국의 개별적 노력과 더불어 원전 보유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일본, 중국, 한국은 세계 원자로 보유 순위에서 각각 3위, 4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 나라의 원자로 수를 합치면 전 세계 원자로의 약 4분의 1에 이른다. 원자력 안전을 위해 한중일 3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시각: 동북아 지역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자국의 원자력 발전 안전문화와 정책,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각국의 개별적 노력과 더불어 3국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원자력 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제3차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TRM+) 등이 성과로 언급됐다. 한중일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는 현재 3국 원자력 안전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체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행동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향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3국 협력을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문화협력은 일반적으로 외교·안보 이슈보다 민감성이 낮고 환경·에너지협력 등 다른 연성 이슈보다 기초 비용이 적게 들어 화해와 협력을 위한 첫 단계로 활용된다. 수많은 갈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문화협력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협력적 리더십’ 세션에서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장은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협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문화 교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경제협력과 평화 지향적인 지역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중일 3국 간 문화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일본에서 한류가 혐한류로 변질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나친 상업성과 일방적 문화 수출 및 수입 배제는 오히려 반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면 타국 문화를 침투 도구로 여기는 인식이 커져 배타적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문화협력이 결국 전반적인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패널리스트들은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중일 간 문화협력을 장기적 과제로 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차별화된 협력 방안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각국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 역사는 역사일 뿐 미래가 될 수 없다

한중일 3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역사 및 영토 문제는 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큰 장애 요인이다. 3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뿌리 깊은 불신을 제거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5년 12월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보상 등 구체적 이행 또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주포럼에서도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협력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미해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 모색’ 세션에서는 동북아국제법포럼(ILNEAF)이 한중일 3국이 연관되어 있는 국제법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개되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런 관련 지식 축적이 동북아 갈등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TCS를 통한 3자 대화, 한중일 간 지식 포럼 확립 및 장기적 운영을 바탕으로 하는 점진적 갈등 해결 방식과 3자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의 ‘역사문제’와 리더십’ 세션에서는 동북아 전문가들이 역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유의상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 대사는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 해석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빈

번해지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된 것이 동북아 갈등이 심화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각국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민족사의 관점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역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교과서 내용을 분석·검토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통 교과서 작성과 함께 역사 교육의 당사자인 한중일 3국 학생과 교사 간 방문 수업 등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강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영토 문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저해 요인이란 점에서 양자 간 문제가 아닌 역내 포괄적 안보 현안이며,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동북아시아 해양 질서와 지역협력: 협력 상승의 장' 세션에서는 역내 해양 갈등과 분쟁이 역사적 주권 집착뿐 아니라 해양을 보는 시스템적 시각 차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의거해 악화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관련국 간의 상호 신뢰 구축과 위기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 해결책으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핫라인, 2014년 역내 21개 해군이 합의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CUES)을 수색과 구조 훈련 등 군사적 범위만이 아닌 법 집행 등 비군사적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interview

'평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적 석학

요한 갈통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양허우란

## “제주포럼에 북한 인사 참석 기대”

### 평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평화 연구는 이론과 실천의 상호 보완이 중요하다. 평화 연구의 목적은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내재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이를 구현하는 데 있다.

### ‘평화 저널리즘’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다른 언론 매체와 동일하게 ‘평화 저널리즘’은 대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평화 저널리스트가 추가로 던지는 질문은 첫째, 내재된 분쟁은 무엇인지 둘째,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다. 즉 현상이 아닌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언을 한다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남북한이 해양경계선을 놓고 벌이는 분쟁해소 방안으로 공동 어로구역 설정을 추진하는 일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어로구역을 운영한다면 상호 간 신뢰 회복은 물론 이익 창출도 가능하다. 어업 수입은 양측이 각각 40%씩 분배하고 20%는 설정 구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조건에 동의한다면 좋은 출발이 될 것 같다.

공동 항공노선 운항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항공은 평양을 제외한 동



‘평화학(Paxology)’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적 석학 요한 갈통 박사는 노르웨이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PRIO) 창설자로 평화의 개념을 정립했다. 주요 저서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등이 있다. 그는 평화운동가로서 전 세계 분쟁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시아 모든 국가에 취항노선이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항공편을 운항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고 이것이 평화 통일을 위한 더 많은 방안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 제주포럼 같은 대화 플랫폼이 평화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제주포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포럼 환영만찬에서 한국 통일부장관이 만찬사를 통해 정부 입장을 대변했듯이 북한측 인사가 제주포럼에 참석해 그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된다면 평화 포럼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중과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화 비전을 심어 주는 것이다. 유명 교수의 말을 인용하거나 평화의 정의, 역사 등을 나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여러 비전에 집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남북 공동 어로구역, 항공 운항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예다.

##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체 구축 목표”

**TCS 사무총장으로서 한중일 3국 간 새로운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계획인지? TCS의 역할은 무엇인지?**

먼저 제주포럼 같은 국제회의에 여러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평화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다. TCS는 창설 이래 줄곧 제주포럼에 참여해왔다. 2014년까지는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한 주제로 세션을 열었고, 올해는 핵 안보, 관광 산업 등을 주제로 다뤘다. TCS의 가장 큰 사명은 대중에게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이해 차이도 존재한다. 특히 양자 간 입장 조정이 가장 어려운 듯하다. 국가 간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 한중일 3국은 지역 안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것 없이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TCS의 역할은 세 나라가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 추진체가 되는 것이다. 3국이 경제 번영이란 공동 목적을 갖고 서로의 차이점에 적절히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제주포럼 같은 다자 대화 플랫폼이 평화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제주포럼은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도모하기에 매우 좋은 무대다. 3국은 아시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 주재 중국대사를 역임한 고위 외교관이다. 또한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부대사,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 외교부 한반도북핵전담대사를 지냈다. TCS는 한중일 3국 간 평화와 공동번영 비전 실현을 위해 2011년 9월 3국 정부가 공동 서명·비준한 국제기구다.

아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3국 통합 GDP는 아시아 전체 GDP의 80%에 이른다. TCS는 3국 간 경제협력체 건설이 목표다. 국제사회에서 한중일 3국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제주포럼은 3국 협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몇 년간 제주포럼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아졌다. 제주포럼은 한국의 발전과 문화를 알리기에 좋은 무대이며 한중일의 정중양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3국 협력을 도모하기에 적합하다. 제주도는 천혜 자연유산과 더불어 국제기구가 위치하기에 지리적인 이점이 많다. TCS도 이를 활용해서 자체 세션을 할 수 있으니 상호 이득이다.

제주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의 상징성은 이 시대 저명 학자, 싱크탱크, 정책입안자, 언론인 등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견해와 관심사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포럼의 힘이다. 특히 올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참석이 포

럼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제주포럼은 그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평화 정착을 위한 학자, 싱크탱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평화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제주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 등 여러 참가자를 만날 수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친목을 도모하면 평화 정착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제1호 2016-1 | 발행 2016년 12월 9일 |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등록 제 652-2008-00002호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우) 63546 | 전화 064-735-6533 | 팩스 064-738-6539 |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 디자인·제작 DesignZoo

© 제주포럼 사무국 이 글은 2016년 5월25~27일 열린 제11회 제주포럼에서 발표된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제주포럼 사무국이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제주포럼 조직위원회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비매품>

# JEJU FORUM REVIEW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635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33 Fax 064-738-6539 Email [jejuforum@jpi.or.kr](mailto:jejuforum@jpi.or.kr) Website [www.jejuforum.or.kr](http://www.jejuforum.or.kr)  
Facebook [www.facebook.com/jejuforumpp](http://www.facebook.com/jejuforumpp) Blog <http://blog.naver.com/jejuforum>

〈 비매품 〉



9 788983 764123  
ISBN 978-89-93764-12-3 (전 4권)